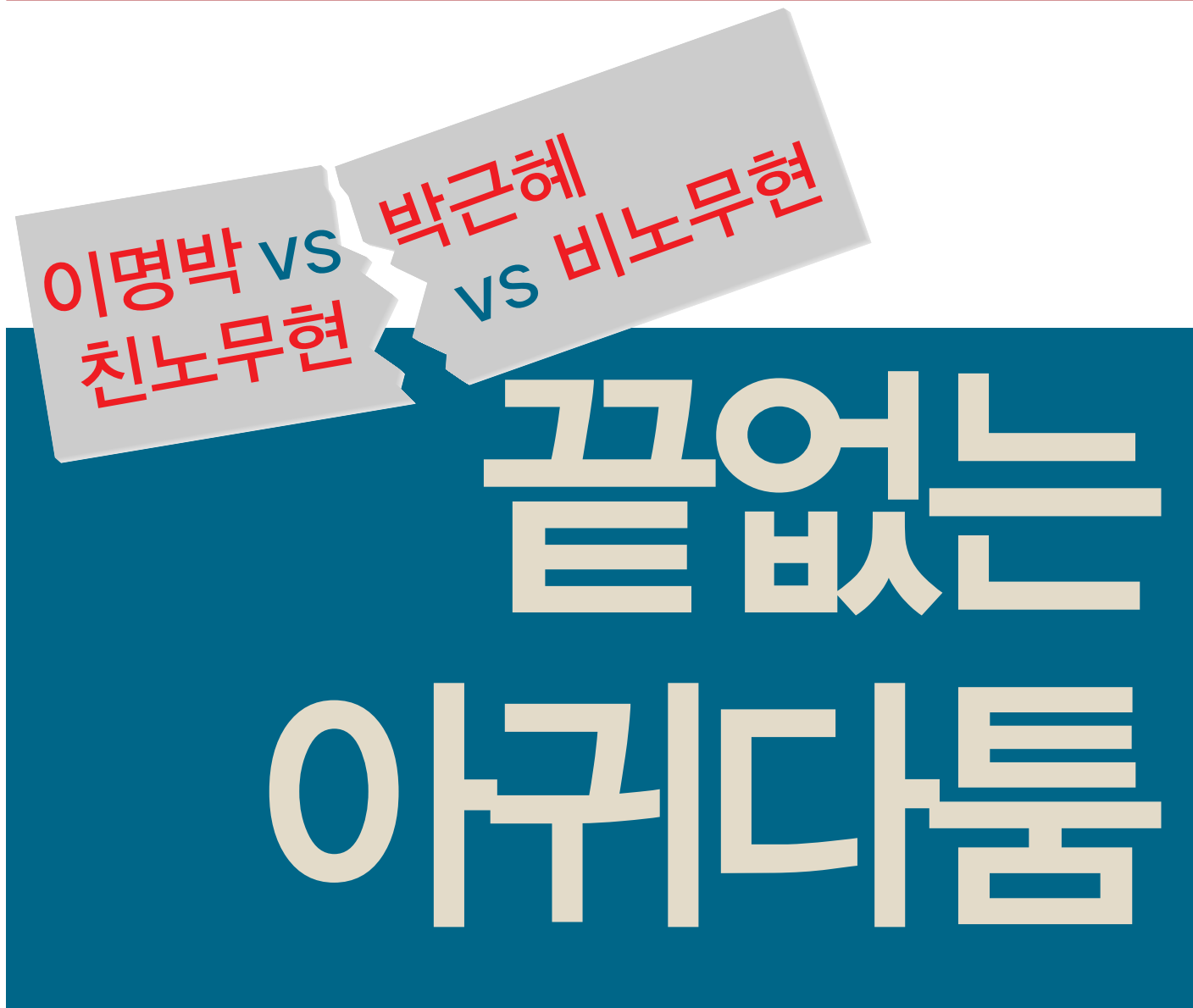




진보진영의 대안을 건설할 기회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기성 정치권의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21>의 지적처럼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는 이런 불확실성을 가볍게 보고 강재섭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내가 옆집 똥개도 아니고 더 이상 구질구질 하게는 안 하겠다”는 강재섭은 이제 이명박의 ‘똥개’가 되려는지 이명박에게 유리한 ‘중재안’을 냈다.

그러자 ‘박사모’는 “전쟁은 시작됐다. 5만 박사모는 쫓겨하라. ... 결연히 일어나 박근혜를 지키자”는 ‘격문’을 발표했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강재섭은 배신자”, “이명박은 빨갱이”라며 난동을 부렸다. 고스톱하듯이 꿈수와 책략으로 정치판을 굴러 온 박근혜는 “고스톱을 치다가 물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반발했다.

판을 깨겠다는 박근혜의 기세에 이명박이 한발 물러서며 위기는 봉합됐지만, 이명박은 <연합

뉴스> 기자에게 “이제 진짜 전투로 가는 거다”라고 말했다.

당직 인선 문제, 경선 세부규칙 등에서 양쪽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후보 검증’이라며 지저분한 폭로전도 계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을 쪼갤지, 한 쪽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할지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다.

산산조각

몇 가지 요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먼저, 반사이익에 기반한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에서 급속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한 달 사이에 한나라당 지지율은 10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사람들은 ‘차떼기당’의 아귀다툼을 꼴보기 싫어하고 있다.

이른바 ‘당심’과 ‘민심’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박근혜는 ‘당심’에서, 이명박은 ‘민심’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모순이다. 따라서 서로 양보할 리도 없지만, 분열해서는

집권의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다.

박근혜는 ‘당심’(전통적 보수파)의 지지가 높지만 ‘독재자의 딸’로서 ‘민심’에 약하다. 따라서 전통적 보수파의 지지를 무기로 ‘이명박 폭로전’을 하며 ‘고스톱’에서 이기려 할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민심’에 강하지만 이것도 불안정하다. 이명박 지지자의 과반수가 ‘이명박은 진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더구나 ‘두나라당’의 정치 모리배들은 죄다 ‘이명박당’과 ‘박근혜당’으로 줄서기한 상태다.

<조선일보>의 류근일은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느냐라는 것”이라고 다그치지만, 아귀다툼 중인 ‘차떼기 웰빙족’에게 이런 사명감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두동강날 위기’를

잠시 봉합했다면, 열우당은 ‘산산조각날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과 정동영·김근태가 주고받는 막말 속에 불신과 증오가 싹트고 있다.

노무현 측은 정동영·김근태가 “그 인기 없다는 열우당보다도 지지도가 낮으”며 “구멍가게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유시민 홈페이지에서는 “지지율이 합쳐서 3퍼센트밖에 안 되는 정동영·김근태는 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설문 조사까지 진행했다.

김근태는 “[한나라당과 대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협박했던] 노무현의 과거도 까발리며 “[노무현은] 사실상 한나라당과 정책 차이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동영을 ‘남북열차 시험운행 행사’ 탑승자 명단에서 빼버렸고, 정동영 쪽은 “치사판스 같은, 뻔뻔이 소갈머리 같은 ... 청와대 간신들”을 비난했다.

» 3면으로 이어짐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6~7면

계명대 임운택 교수 인터뷰

한-EU FTA,
무엇이 문제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유럽은 우경화하는가

8~9면

토니 블레어 사임을
축하하며

9면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사회운동

4면

‘삼성 비정규·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단’ 인터뷰

11면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중단하라

12면

www.counterfire.or.kr

<맛불> 온라인 기사

터키 ‘세속주의’ 운동 이면의 진실
문제는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군부의 쿠데타 위협이다

대선 이후 프랑스

사르코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사회당은 우경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급진 좌파가 시급히 정치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공무원 퇴출제를 막아내다

강원도 원주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과 연대로 퇴출제를 막아냈다. 이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그 꿈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오늘 하루 중 최고의 12초였다.”

– ‘조지 부시 사임’자막을 12초 동안 내보낸 <CNN>의 방송 사고를 본 시청자 반응

“사르코지가 잘못하기만 버르고 있어. 전쟁을 하든지, 혁명을 하든지 할 거야!”

– 반사르코지 시위에 참가한 터키 출신 몬펠레 실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 사람이 되거라.”

– 유치장에 갇힌 김승연이 아들과 화상면회에서 울먹이며 한 말

“[외국에 가보니] 대학출신 종업원이 ‘우리가 노동자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서울시 오페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어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어요.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봐.”

– 천박한 반노동자 시각을 드러낸 이명박

“지금 내 손에 총만 있다면 ‘조승희’가 되고 싶지만 아직 희망이 있으니 참는다.”

– 박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노무현만 빨갱인 줄 알았는데, 이명박하고 이재오도 빨갱이잖아!”

–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시위한 ‘한나라당 당원 권익 찾기 운동본부’ 회원

“청와대의 이런 치사뻘스 같은, 뻔뻔이 소갈머리 같은 옹졸한 행위는 잘 못된 것 ... 청와대 간신들의 횡방으로 정 전 의장이 탐승하지 못하게 됐다.”

– 정동영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 초창자 명단에서 빠진 것에 분개하는 열우당 정청래

교수노조가 합법화돼야 대학이 바로 선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사학 총장들과 보수 언론들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사실 왜곡과 거짓 선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손병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 하고 주장했다. 마치 교수노조가 합법화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수노조가 불법인 예가 없다.

미국의 교수노조는 5백 개의 캠퍼스 지회와 39개의 주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은 4만 5천 명이다. 영국에는 조합원이 6만 7천 명인 NATFHE와 조합원이 4만 8천 명인 AUT 2개의 교수노조가 있다. 일본에서는 국립대 교수노조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씨는 인도의 한 업체에서는 대졸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데 우리 나라에서 교수까지 노조를 만들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연히 인도에도 교수노조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노동법에서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보수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 직업 안정성, 근무조건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다. 그런 교수들이 노조를 만들어 집단이익을 보장받겠다고 할 때 그걸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고, 근무조건이 좋다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수들의 보수, 안정성, 근로조건 등은 매우 양극화돼 있다. 교수는 우리 나라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양극화가 심한 직종이다. 예를 들어 보수를 보자.

처음 전임강사 발령을 받는 교수(나이 35세 전후)들의 임금이 호봉표 상으로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나이 25세 전후)에 미치는 못하

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의 14퍼센트, 2년제 대학의 19퍼센트다.

1주일 전에 어떤 교수 한 분은 학교의 강요로 연봉 4백80만 원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었냐고 교수노조에 상담을 하러 왔다. 올해 2월에 열렸던 국회 공청회에서는 한 교수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석궁 사건’

“내가 처음 전임교수로 취직했을 때 너무 기뻐다. 그러나 첫째 달 월급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한 달 월급이 1백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교수로서 이렇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 얼마 뒤 나는 교수협의회를 만들었고 교수노조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월급이 상당히 올랐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단이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극단적인 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떼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힘든 투쟁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재단의 부정을 폭로할 수 있었다.”

이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교수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저임금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인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이사장이나 총장의 등록금 횡령으로 대학 재

1월 30일 열린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집회

정이 악화했거나 봉건적이고 폭력적인 독재 경영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우리 나라에는 비리 사학이 많다. 교수들이 알고 있는 사학비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학비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내부 고발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은 교수이다. 교수들이 나서지 않는 한 사학비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가 수많은 교수들이 거리로 쫓겨났다. 재단의 미움을 사서 재임용 탈락이나 징계를 통해 해고되면 복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되지 못한 교수가 1백20명이 넘는다는.

불행한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교수들의 억울한 처지를 잘 보여 준다. 교수들은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교수들에게는 일반 노동자가 노동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적 인권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에게 노동조합이 보장되고 일반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용기를 내어 재단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이 제대로 교육에 쓰이게 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이 글의 전문은 <덧붙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울산과학대 여성노동자들이 정몽준을 무릎 꿇게 하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끈질기고 단호한 저항과 지역노조·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 임금보전, 책임자 처벌 등을 쟁취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과학대 이사장인 현대재벌 정몽준을 굴복시킨 것이다.

학교 측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하고 항의 농성하는 여성 노

동자들을 감금·폭행·성희롱하기까지 했다.

이에 맞서 두 달 가까이 농성해 온 여성조합원들은 4월 27일 정몽준 사무실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5월 2일 금속노조 산하 울산지역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 잔업거부”를 조직했다.

울산과학대 김순자 지부장은 “원청이 고용승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한국에서 처음있는 사례라고 하

터군요. 우리가 열심히 투쟁한 것도 있지만 지역 노조와 단체 분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승리하는 데 중요했던 것 같아요”라며 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승리는 무더기 해고와 외주화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었다.

최영준

5월 9일 승리 소식에 기뻐하는 노동자들

한미FTA는 폐기 대상일 뿐이다

한미FTA 반대 여론을 대중 투쟁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장호중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발표해서 한미FTA 재협상이 불거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협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동기본권과 환경보호 조항은 위선일 뿐이다.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정부 중 유일하게 교토 협약(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협약)에서 탈퇴한 정부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의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신에서 노동·환경 조항을 이용해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 문제를 (추가로) 다뤄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타결된 한미FTA 협상이 ‘국익’을 최대한 지켜낸 내용이므로 노동·환경 문제 때문에 재협상을 해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와 공무원노조 탄압에 골몰해 온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익’이 노동권 보장이나 환경보호와는 무관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양국 정부 모두 노동조건 개선이나 환경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부시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과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방하지 못한 부문이 못내 아쉬운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비준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마당에 새로운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그러지 않아도 분출구를 찾고 있는 국내 FTA 반대 여론에도 기름을 부을 게 뻔하다”고 걱정했다.

물론 미국이 본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끝까지 회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재협상을 하더라도 양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공공 서비스 시장화라는 대전제를 공유할 것이다.

한미FTA에 반대해 장기간 단식농성까지 했던 천정배 의원은 “무조건 재협상 불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민생 그리고 주권을 위협하는 협상 내용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 전면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 기여해 온 <경향신문>도 “재협상론은 FTA 졸속 추진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 내용은 전체가 개악 투성이라서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양국 정부 모두 어느

쪽에도 그런 구실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재협상 논란으로 벌어질 기회를 이용해 6월 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중적 반대 운동 건설에 매진할 때다.

한편, 최근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미FTA 후속 대책을 논의할 범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FTA 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한미FTA 체결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혁신의 동력 마련을 위한 FTA의 현실적 필요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투쟁의 김을 빼는 소리를 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하지 않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제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총력 투쟁”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어느 산별 하나에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속노조 파업을 민주노총 전체로 확대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분출구를 찾고 있는 한미FTA 반대 여론”을 대중적 투쟁으로 폭발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때이다.

파키스탄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다

[편집자] 파키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11월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둔 무사라프가 자신에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해고한 것을 계기로 폭발했다.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사라프는 장기 집권을 정당화해 줄 대법원장이 필요했다. 파키스탄의 정치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사회주의자 레이아즈 아마드가 소식을 보내 왔다.

5월 12일 카라치 거리에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다. 그들은 파키스탄의 군사 독재자 무사라프가 해임한 전 대법원장을 환영하러 모인 시위대였다. 64일째 계속된 이 시위는 처음에는 변호사들이 주도했으나 이제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수많은 대중이 참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위가 분출하는 것을 보며 소수 특권층 지배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경찰과 조직 폭력배, 집권당 무장 세력이 카라치 곳곳에서 시위 행렬을 공격해 34명을 살해했다.

전 대법원장에 반대하는 무장 정치 세력이 도시 전체를 에워싼 채 조직 폭력배나 경찰과 함께 행동했다.

전 대법원장이 카라치 도심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정부 각료들이 공언했을 때, 이 유혈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상

야만적인 탄압과 인명 살상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 카라치 고등법원 청사에서 변호사 수백 명이,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계속했다.

무사라프에 반대하는 정당들은 5월 14일 하루 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고, 변호사들은 전 대법원장이 복귀하고 무사라프가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을 세웠다. 5백여 명의 변호사들은 전 대법원장 환영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 건물에 진입하기도 했다.

무사라프 군사 정권은 전 대법원장과 25명의 변호사가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8시간 동안 억류했다. 그들은 결국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가야 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카라치 방문이 금지됐다.

이번 시위는 7년 간의 군사 정권 치하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주요 정치 운동이다. 무사라프가 전쟁과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한 것 때문에 대중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

수백 명의 정치 활동가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와 탄압을 뚫고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는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겁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사라프 장군이 퇴진할 때까지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공항에서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배너를 든 어떤 항공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정권이 국가 부문을 사유화해서 얻은 것은 아주 하찮은 것뿐이다. 이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한 정치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군사 정권의 종말이 아주 가까워졌다. 우리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원, 좌파 단체들,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 큰 연합체를 건설하고 있다.

>> 1면에서 이어짐

<조선일보>는 “어차피 같은 편인 배우들이 억지로 싸우는 것”이고 “대통령의 폄박을 불러와 거기에 대들면서 탈당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모양새”라며 ‘친노’와 ‘반노’의 갈등을 ‘음모론’에 맞춰 해석했다.

그러나 개혁 사기꾼들의 음모가 먹혀들기엔 위기와 분열이 너무나 심각하다. ‘반노’ 쪽은 일단 탈당할 듯하지만 “탈당을 하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으면 한심하다”(열우당 문학진)고 걱정이다.

노무현은 지지율 소폭 상승에 “이제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우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지지자가 노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여론 오도 현상”

(천정배)일 뿐이다. 노무현의 지지 기반 붕괴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이다.

이것이 ‘산산조각날 위기’의 배경이며 어느 ‘조각’도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 위기의 심각함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대선 승리는 이미 포기한 채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뼈아픈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자면서도 “열린우리당도 다 함께 하자”는 천정배식의 정계개편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범여권’과 협력을 모색하던 ‘미래구상’ 등도 독자 신당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노무현은 최근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이라는 글에서 “한미FTA 반대가 거세지고 지지층이 떠난다고 할 때… 내색은 못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고 실토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노무현 정권 지지층의 이탈과 붕괴는 거대한 정치적 공백을 낳았다.

영똥한 자들이 이 공백을 차지하거나, 이 공백이 사라지기 전에 진보진영이 그 공백을 차지해서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한 운동의 일대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강력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전지윤



한미FTA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민주당과 부시가 새로 합의한 이른바 “신통상정책”은 한미FTA를 둘러싼 지형을 변화시켜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노동 부문에서 신통상정책이 한미FTA에 적용된다면 한국 정부는 FTA의 대가로 복수노조와 실업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 만일 의약품 분야의 신통상정책을 한미FTA에 적용하면 한미FTA의 핵심 내용인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분야 협상을 다시 해야만 한다. 미국 제약 자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그러나 벌써 미국 통상본부 대표 슈워브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므로 의약품 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페루·콜롬비아 등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나 의약품 분야에서 신통상정책이 공화당의 통상정책보다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 적용 배제에서 보듯 한미FTA에 대한 신통상정책 적용은 부분적으로는 진보적이겠지만 미국의 축산·자동차 기업들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민주당의 통상정책은 미국노총(AFL-CIO)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이다.

이번 신통상정책도 결국 신속협상권한(TPA)을 연장해 주는 대신 민주당이 대변하는 자본 분파의 이해를 더 반영하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래의 산물이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미국노총이 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심지어 민주당의 ‘말단 하원의원’들조차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의 시민단체들이나 불룸버그통신이 지적하듯 상황은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계급 역학 관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반전 운동에 따른 부시의 패배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한미FTA의 앞날을 매우 불확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한다. 노무현도 체면이 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협상이라니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재협상을 하면 6월에 정식 체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뿐인가? TPA의 시한을 핑계 삼아 막가파 식으로 몰아붙이기도 어려워졌다. 더욱이 대선까지 6개월도 안 남은 정권에서 한미FTA 재협상 타결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러나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거부로 아예 한미FTA 정식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재협상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난감하겠지만 어찌됐든 한미FTA의 시간표는 다시 짜여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도 현 정부의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이미 협상이 시작된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지속하면서 한미FTA를 기정사실화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난해 9월 독일 총리 메르켈이 제안한 미-EU간 FTA(TAFTA, 대서양자유무역협정)가

한미FTA 협정을 디딤돌 삼아 추진력을 얻어가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EU FTA나 한중FTA 등 다른 FTA들이 ‘전 세계 FTA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는 한미FTA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도 한미FTA는 결국 다시 문제가 된다.

둘째, 자발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가속화이다. 한미FTA가 불안해진 만큼 자본과 보수 세력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의 의료법 개정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힘들 것이라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반대하던 의사협회가 돈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치 개혁입법처럼 포장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병원 밖으로의 이윤을 배분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영리법인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병·의원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환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해 보험회사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특정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삼성이나 현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이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결합이 미국의 영리의료시스템(HMO)의 핵심이다. 결국 공적 보험제도 바깥에 보험사와 영리병원이 지배하는 별도의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 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이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속화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의료급여법 개악 등 복지정책의 전반적 후퇴나 노사관계로드맵 관철 등 ‘혼자서도 잘하는’ FTA, 즉 자발적 신자유주의 조처들이 더욱 가속화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한미 양국 자본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 반전 운동과 미국내 반전 운동에 따라 한미FTA는 그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한국에서의 반전 운동은 이미 한미FTA를 차기 대선과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애써 표정을 관리하겠지만 한미FTA는 이미 현 정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더해 새로운 정세는 협정 정식 체결조차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더 대중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운동의 힘이다. 현 상황에서 국익에 근거한 재협상을 주장한다거나 다른 FTA를 먼저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도 아니며 노무현 정부가 도망갈 길을 터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한미FTA 반대 운동은 모든 FTA가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자발적인 신자유주의 조처가 FTA와 같은 반노동자적인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할 기회다.

● 감옥에서 온 편지

‘다함께’ 동지들께

변외성 동지는 지난해 한국노총 지도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아합에 항의해 한국노총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해고 택시 노동자다. 변외성 동지는 전해투 소속의 투사이자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다. 그가 원주교도소에서 〈맞붙〉에 편지를 보냈다.

변외성 동지가 보낸 편지의 전문은 〈맞붙〉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저는 “1천5백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

먹은 한국노총 관료들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교조적인 운동 방식을 폭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 한국노총 김성태 부위원장실을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황망간에 끌려오다시피 원주교도소로 오고 나서 분노와 허탈 속에 방황할 때 제일 먼저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이 〈맞붙〉이었습니다.

허세욱 동지를 얼마 전에 노동자 계급 가슴 속에 묻고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철학과 식견이 부족한 반동세력들에 의해서 남한 노동계급의 고향을 갖다바친 FTA 체결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하부 구조로 편입·복속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의 기반하에 창조적인 민중 중심 경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에 심각한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행위입니다.

노무현 같은 정치 세력을 우리는 “동요하는 (자유주의적) 중간 정치세력”으로 또는 “황색지향주의” 정치로 규정합니다.

이들에 대처하는 방향은 항상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중의 이익에 따르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동요하고 반동적인 속성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투쟁합니다.

통큰 투쟁, 다층적 투쟁을 위해서는 가장 광범한 전선을 구축해 투쟁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통큰 단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FTA는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맞붙〉편집부 동지들, ‘다함께’ 동지들, 〈맞붙〉독자 여러분!

“운동은 결코 폼나지 않고 빨리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운동은 결단코 화려한 게 아니니까요!”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투쟁!

2007년 4월 22일 원주교도소에서

변외성 드림



한-EU FTA 협상이 5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도 한-EU FTA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범국민의 '한-EU FTA 전략워크숍'에서 총괄 발제를 맡았던 임운택 계명대 교수를 <잇불> 기자 강동훈이 만나 인터뷰했다.

우선, EU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미국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유럽은 원조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개방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국적자본의 이해를 관찰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과정을 보면 대단히 빨리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고,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에서는 큰 문제 없이 타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은 아직까지는 세계 1등 지위를 미국에게 양도하고 대신 미국을 쫓아가면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처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경험하거나, 칠레처럼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민영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들과 맺은 FTA는 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부문에서 개방을 천명했고, 경제특구에서 상당히 많은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공세적 자세를 취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한-EU FTA 협상 대표인 맨델슨과 유럽 상공회의소장이 밝힌 것처럼 한미FTA의 기본틀을 가져간다고 하니 미국의 뒤를 쫓아 '후발 주자'의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EU FTA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

“한-EU FTA의 본질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한-EU FTA는 특히 공공 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EU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등에서 큰 영향이 있겠죠.

금융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유럽이 생명보험이 강한데, 이미 알리안츠·ING생명 등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이미 시장과 연계 속에서 전이되고 있는데, 한-EU FTA가 체결되면 적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파장이 큰 게 물기업들이죠.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사례는 물 사유화의 대표적인 피해입니다. 베올리아와 온데오 같은 세계 5대 물기업이 대부분 영국·프랑스 회사거든요. 따라서 물기업들의 [물 사유화] 공세가 거세질 것입니다.

이미 다국적 물기업들이 한국 지방자치체를 통해 접촉을 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나가면 정부 조달 문제도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우체국 등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력 부문도 협상 대상이 될 듯합니다. 유럽은 공장 지역마다 전력 회사가 다른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결국 공공 서비스가 사적인 영역으로 이행되는 건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체들이 대부분 재정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사유화에 큰 유혹을 느끼고 있죠.

사회 공공 서비스들은 계급 갈등의 산물인데, 이런 것들이 사적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사 발전의 후퇴인 셈이죠.

사유화 비용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서비스 질도 저하하겠죠. 그리고 사회 연대가 깨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일부는 EU와 미국은 다르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유럽의 사민주의적 자본주의는 미국 자본주의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에게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기

본 성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블레어나 슈뢰더, 조스팽 등에 이르러 사민주의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민주의의 모습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6~97년에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이 집권했는데, 당시 유럽 정당들이 모인 리스본 회의에서 유럽이 주주자본주의로 전환을 선언합니다.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GATS 협약에서 비교적 손쉽게 타결에 이른 것을 봤을 때 미국과 유럽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한-EU FTA 반대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한미FTA가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 더 추진되고 있어서 싸움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에 진보진영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 우리가 다시 결집을 해내고 이 싸움을 유리하게 진행한다면 EU FTA와 싸움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5월 12일] 언론을 보니까 미국에서 추가 협상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싸움을 재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일련의 싸움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사회 세력의 연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보진영에게도 진보적 개념의 아시아 공동체 또는 대안적 거버넌스[통치] 체제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세력이 연대하고 진보진영이 담론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FTA 반대 투쟁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진보진영이 모인 만큼,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한 실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폭력 재벌 김승연 이름 빼라”

성공회대에는 '승연관'이라는 건물이 있다. 조폭 재벌 김승연이 성공회 신자이고, 새천년관 건립 당시 대출금 1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이유로 성공회대 당국은 대학본부 건물을 '승연관'이라 이름짓고, 5대 이사장 자리를 선사했다.

이런 비리·조폭 재벌의 이름을 딴 건물이 “진보대학”,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자처하는 성공회대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성공회대

학생들이 '승연관' 이름 바꾸기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 승연관이 그 '승연'이었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 이후 너무 부끄러웠다”며 3시간 만에 2백 50여 명이 서명했다.

‘승연’관

그 후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김 승연관 이름 바

꾸기 운동본부'를 꾸렸고, 지난 9일 '운동본부'는 '김승연관' 이름 바꾸기 집회를 열었다. 시급하게 준비했음에도 6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활력이 넘쳤다.

총학생회장은 “‘승연관’ 개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학교 측은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끝까지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NGO와 한국 사회 운동' 과목을 가르치는 안진걸 교수



는 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잘못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성공회대 학생위원

장은 “김승연이 낸 기부금 중 장학금 혜택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규탄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비리 재벌, 폭력 재벌 김승연관 개명하라!”, “대학은 기업의 계열사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승연관'까지 행진했다. 학생들은 항의 서한을 학교측에 전달하며 자신이 원하는 '승연관'의 새 이름을 건물 안내 입간판에 덮는 퍼포먼스를 했다.

우리는 더러운 비리 재벌의 이름을 반드시 성공회대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소원(성공회대 학생)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최일봉(맞불) 편집자

지난 몇 달 새 《맞불》에 실린 진보 선거연합 관련 기사는 한편으로 김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한규한 사이에, 또 이들이 상이한 시기에 쓴 기사들 사이에 뉘앙스가 다르곤 했다. 핵심 문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열우당 탈당 국회의원 천정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5월 15일, 미래구상은 '통합·변영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과 통합해 '통합·변영을 위한 미래구상'(이하 통합변영미래구상)을 창립했다. 이들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통합변영미래구상은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일부 주요 NGO 지도자들의 정당이다.

'다함께'는 이들 진보적 NGO를 노무현 정권의 외곽 기구나 중간계급 자유주의 단체로 보는 것에 반대해 왔다.(얼마 전 분신한 노동자 허세욱 동지가 몇몇 NGO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NGO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개혁(개량)주의의 우파라는 관점이라고 언제나 우리는 주장했다.

노무현의 개혁 미사여구와 알량한 개혁이 그의 반(反)개혁적 실체보다 두드러져 보였을 때 NGO는 마치 노정권의 외곽 기구인 양 비쳤을 것이다. 가령 한나라당 등 우파의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운동이 일어나고 NGO 지도자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을 때 많은 좌파들이 NGO가 "바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이 점차 우경화하자 많은 NGO들이 노무현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은 통합변영미래구상이 "반 FTA 신당"(정체혁·레디앙) 기사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NGO 자체와 NGO를 정치적 기반으로 한 정당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통합변영미래구상이 범여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정당이 된다면 그것은 '다함께'가 그 동안 배격해 온 '열우당 후신이나 아류'일 것이다. 이 경우 통합변영미래구상의 사회적 기반은 자본가 계급의 일부(소수파)이고 될 주요한 부분이 될 듯하다(인 것이다. 정치적 기반이 NGO 지도자들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만약 통합변영미래구상이 자본가들에게 퇴짜맞아 범여권 일부의 정당이 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범여권 일부의 정당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냥 NGO 시절의 사회적 기반에 의존하기로 한다면 그때는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에 있는 우파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통합변영미래구상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와 두 길 보기는 그들이 동참을 기대하고 있는 천정배의 모호한 두 길 보기 자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통합변영미래구상이 천정배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돼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 단일후보 세우기를 위한 선거연합이 결성될 경우 통합변영미래구상은 참가시키려 노력하고 천정배는 배제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심지어 치졸한 자세로 여

겨질 것이다. 통합변영미래구상이 천정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둘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둘을 동일시해야 한다.

이들이 어느 길을 택할지는 지금으로선 알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범여권의 정당이 되기를 택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필패(必敗)하리라는 것이다. 범여권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기존의 사회적 기반(NGO의 사회적 기반)에 의존하기로 하고 대선에 참가한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서서는 그들을 단순히 경쟁 대상으로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때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 문제가 발생한다. 열우당 와해로 빚어진 정치적 공백을 이들이 민주노동당보다 유리하게 메우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개혁 배신과 대중의 기대 좌절 사이에 생겨난 간극을 그저 선전만으로 메울 수는 없다. 이것은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도전 좌절 경험에서도 드러났다.

레닌이 《'좌익' 공산주의 - 철부지 같은 혼란》(1920년)에서 역설했듯이 "사실상 전체 계급, 곧 자본에 의해 억압당하는 광범한 근로 인민 대중이 그러한 입장(전위를 직접 지지하거나, 적어도 전위에게 우호적인 중립을 취하고 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선전과 선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전과 선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선전과 선동은 대중의 정치적 경험에 바탕을 뒀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사회주의자는 광범한 대중에게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레닌은 자본주의적 의회 제도가 "역사적 폐물"이 됐다고 주장하는 독일 공산당원들이 "우리에게 폐물이 된 것을 계급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대중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계급 전체의 (계급의 전위인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또 바로 노동하는 민중 전체의(대중의 선진적 인물들뿐 아니라) 의식과 준비 정도의 실제 상태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강조는 모두 레닌 자신의 것)

그래서 사회 변혁 운동가들에게는 폭로와 강령 선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계획과 제안은 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아야 하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들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라크 파병안과 비정규법안에 찬성하고 법무장관 시절에 한미 FTA에 찬성한 천정배의 전력과 포퓰리스트로서 그의 실체를 우리가 간파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가 지금은 노무현과 충돌하고 있고 한미 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광범한 대중과의 접촉점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레닌이 인용한 러시아 사회주의자 체르니셰프스키 말대로 "정치적 행동은 네프스키 간선 도로[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넓고 일직선으로 뻗은 가장 주요한 도로] 같은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변신과 대중의 환상

혹자는 대중이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노무현은 물론 천정배·김근태 등 여권의 개혁과 정치인들에게 더는 환상을 갖지 않게 됐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들의 낮은 지지율이 증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천정배가 아주 최근까지도 여권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고 대중이 여권 전체에 환멸을 느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은 여권의 대표적 또는 부차적 후보가 된 경우의 천정배가 아니라, 여권의 자본가 기반에게 퇴짜맞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진보 쪽으로 넘어온 경우의 천정배인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의 환상은 되살아날 수도 있다.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성 주류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광범하다면 말이다. 지난해 멕시코 대선에서 민주혁명당(PRD) 후보로 출마했으나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여겨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도 1980년대 말 여당인 제도혁

명당 내 반대파로 출발해 곧 사회민주주의적 야당 PRD의 지도자로 등장했다.

1백 년 국제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천대받는 계급들의 운동에서 배출되지 않은 주류 출신자가 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운동 진영의 주요 대변자로 떠오른 경우가 수두룩했다. 기독교 대학생 단체 출신이자 부유한 변호사인 토니 블레어가 1990년대 중엽 영국 노동당의 대표로 떠오른 과정은 그 한 예이다.

파지고 보면, 정태인도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동지로서 환영한다. 진보 인사의 과거가 문제 되느냐는 그가 현재 또는 미래에 진보 진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예비 대선후보들의 지지율도 천정배보다 더 높지 않다. 승리의 전망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대중은 정치적 방향감각을 잃어 사기가 낮아지고 그들의 정서는 방황하기 쉽다.

17대 대선, 민주노동당,

그리고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전술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이맘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현 정세의 단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난다. 그것은 여권이 단말마의 위기에 처해 있고, 여권의 위기만큼은 아닐지라도 우파 야당도 위기에 처해 있고, 진보 세력은 그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2002년 초 여당인 민주당은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집권 연장의 꿈을 꾸고 있었다. 지금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 때는 한나라당도 이회창을 대선 후보로 세워 정권 탈환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지금 그들은 박근혜와 이명박 두 예비 대선 후보 간의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급급하고, 분열 때문에 <조선일보>가 우려하듯이 정권 탈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진보진영의 선두주자 민주노동당은 10만 당원의 정당으로, 지지율 10퍼센트 안팎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강력한 반(反)한미 FTA 운동의 기반에 의존할 수 있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과제는 더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당은 한때 여권 개혁파의 포퓰리즘적 미사여구에 고무돼 희망에 부풀었다가 잔뜩 실망해 의기소침해 있는 광범한 청장년층 대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계급의 미조직 비정규직 종사자들이거나 모종의 천대받는 사회집단 성원들일 것이다.

그들의 사상은 급진적 요소들과 보수적 요소들이 섞여 있고, 현실 정치 면에선 민주노동당과 NGO를 포함한 다양한 진보 정치 요소들을 절충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다른 진보 단체들과 모종의 대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 과정이 꼭 당의 우경화나 기존 원칙의 실용주의적 수정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 내의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자신의 원칙과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전술의 융통성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다. 미래는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연립정부 구성과 연계시키자는 제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통합변영미래구상의 영향력이 선거연합 내에서 민주노동당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이 제안에 찬동할 수 없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찬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민주노동당이 진보 선거연합을 수락하면 통합변영미래구상 주도일지라도 연립정부안을 함께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함께'의 발상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근본적 사회 변혁을 지지하는 맑스주의자로서 우리의 전술은 민주노동당의 전술로 환원될 수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실제로 선거연합을 정부 참여와 연결시킬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NGO 기반의 정당과 함께 정부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문제들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순과 동요를 드

러낼 것이다. 정부 참여는 이를 더 분명히 드러낼 뿐이다.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과 진보적 지식인에 기반을 둔 정당이 갖는 필연적인 성격 때문이다.

정부 참여로 더 분명히 드러날 민주노동당의 모순과 동요 때문에 우리가 선거연합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 오히려 레닌은 이런 종류의 동요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즉, "노동계급 쪽으로 오고 있는 인사들에게는 양보해야 하지만, 자본가 계급 쪽으로 가고 있는 인사들과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울바를 전술을 구사한 결과 완강한 기회주의자들이 고립됐고 가장 뛰어난 노동자들과 뿌뿌르주아 민주주의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사들이 우리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멘세비즘은 허물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나긴 과정으로, 어떠한 타협도 없고 어떠한 유언한 대응도 없다!"는 성급한 '판단'은 혁명부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문제들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순과 동요를 드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천정배가 자본가적 정치 기반을 유지하거나 통합변영미래구상이 그런 기반을 새로 확보해 놓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경우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태도는 어떠한 하는가?

이 경우, 자본가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계급연합인 '인민[민중]전선' 아니냐는 물음 지적이 있을 것이다.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민주노동당이 자본가 정당과 선거연합을 결성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원칙적 반대를 거슬러 자본가 정당과의 선거연합이 결성됐을 때, 우리가 그 민중전선의 바깥에서 활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활동할 것인가 하는 전술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민중전선을 가장 예리하게 비판한 트로츠키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궁극으로 상충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때때로 노동계급 정당이 단기적 이득을 취하려고 자본가 세력과 "엄격히 실용적인 목적에 바탕을 둔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했다(《레닌 사후 제3인터내셔널》 영어판, 168, 175 i 176쪽).

정치적 독립성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부르주아지와 어떤 합의를 하려 할 때는 각 합의마다 별도로 그때그때 실용성과 편의상의 고려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1920년대 중엽 중국 공산당의 국민당 입당도 일종의 민중전선임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초기엔 그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했다고 옹호한다. "그저 미래의 독자적 정치 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전진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 참가하고자 한 선전 단계였던 시기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참가한 것은 완전히 옳

았다."(《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1936년 영국 공산당, 노동당, 성직자들은 물론 부르주아 정치인들도 포함하는 평화협의회에 참가해야 하느냐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질문하자 트로츠키는 그저 바깥에서 태도나 하는 것은 아무쪼록 쓸모없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영향력과 싸워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트로츠키는 1917년 러시아 혁명기의 임시정부가 노동계급 정당인 멘세비키당, 농민과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인 사회혁명당,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결성한 원조 민중전선임을 지적했다. 당시에 정부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볼셰비키당은 정부로부터 좌파 정당들이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열 명의 자본주의 장관들이 퇴임하라고 요구했다. 그와 동시에, 그 온건 좌파 정당들이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사병 대표들의 소비에트(평의회)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자고 요구했다.

14년 뒤에 트로츠키는 술회한다. "대중은 여전히 사회주의 화해론자들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갖고 있는 대중조차 본능적으로 부르주아지와 착취자, 자본가는 불신한다. 바로 이 시기 볼셰비키의 전술은 이 사실에 바탕을 뒀다. 우리는 '사회주의자 장관은 퇴임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임시정부 타도'를 당면 투쟁 구호로 내놓지도 않았다. 오히려 '열 명의 자본주의 장관 퇴임하라'는 한 가지 점을 강력히 되풀이했다. 이 구호는 크나큰 구실을 했다. 그 구호를 통해 대중은 화해론자들에게는 노동 대중보다 자본주의 장관들이 더 가깝고 더 소중한다는 점을 스스로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스페인 혁명의 문제들》, 1931년)

단식하는 천정배를 찾은 한미FTA저지범국민 관계자들 - 천정배의 미래는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유럽은 우경화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당원)

유럽 지배계급 내의 분위기는 호전됐다. 그들은 프랑스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거둔 승리가 유럽연합(EU) 전역의 더 일반적인 우경화 추세를 알리는 전조가 되길 바란다.

머지않아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사르코지의 프랑스, 고든 브라운의 영국이 EU의 유력한 정치적 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지지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열렬하게 옹호한다.

메르켈과 사르코지는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헌법을 부활시킬 공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약간 바뀐 유럽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통과시킬 수 있길 바란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가 만들어낸 악몽, 즉 유럽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소수 특권층과 그들에 맞서 저항하는 국민 대중으로 분열했다는 전망은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선부른 것이다. 주류 정치 수준에서 자유시장 우파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 대륙에서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시작하고 토니 블레어가 지속한 — 을 여전히 추진해야 한다.

2005년 독일 총선은 신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양대 정당, 즉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모두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두 정당은 대연정을 구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 연립정부는 이렇다 할 자유시장 “개혁”을 실행하기는커녕 그런 “개혁”에 합의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저울추

이탈리아에서 대기업들은 1년 전쯤 선출된 로마노 프로디의 중도좌파 연정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변덕스런 우파 정부보다 더 확실하게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프로디 정부는 절반을 갓 넘는 국회 의석 수와 내분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고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한 대륙 전역의 교착상태 해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듯하다. 1995년 11~12월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은 신자유주의 조처 강행이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회적 폭발들 — 특히 2003년 5~6월 연금 개악에 맞선 교사 파업과 2006년 3~4월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최저고용계약법(CPE)에 맞선 학생 반란 — 중 첫번째 사례였다.

만약 사르코지가 이런 저항을 극복하고 자유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승리의 반향은 프랑스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그만

큼 강력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다.

2주 전 대선 결선투표에서 그는 53.06퍼센트를 얻어 46.94퍼센트를 얻은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을 이겼다. 이러한 패턴은 1974년 이후 프랑스 대선 때마다 반복돼 온 패턴 — 온 나라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고, 비교적 사소한 여론 변화가 균형을 허물고 어느 한 쪽에 승리를 안겨주는 — 이다.

이번에 루아얄의 무기력한 선거운동과 프랑스의 강력한 급진 좌파의 혼란은 저울추가 사르코지 쪽으로 기울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르코지는 효과적이고 초점이 분명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자신을 주류 정치권 ‘외부의 인사’로 포장한 중도우파 후보 프랑수아 베이루가 1차 투표에서 18퍼센트 이상 득표했다는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두 유력 후보 모두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징후다.

사르코지는 법과 질서를 훨씬

더 강조하고 사회운동을 탄압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사회운동,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를 모두

날려버린 경험이 있는 사회운동과

대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가 지적했듯,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 — 사르코지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각별히 애썼다 — 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는 우파의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서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사르코지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사회적 구성은 1995년(자크 시라크가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에 시라크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사회적 구성보다 훨씬 더 협소했다. …

“18~24세 유권자 가운데 사르코지에게 투표한 사람은 40퍼센트밖에 안 났다. 이는 같은 연령대 유권자들이 시라크에게 투표한 비율보다 15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치다. … 반면에 … [사르코지는] 최고령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우위를 더욱 굳혀, 65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64퍼센트가 사르코지에게 투표했다. 50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사르코지에게 투표한 사람이 52퍼센트인 반면, 루아얄에게 투표한 사람은 37퍼센트밖에 안 났다.

“사르코지는 또 시라크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 사이에서 득표한 것보다 표를 더 적게 얻었다. 반면에,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 사이에서 좌파의 득표율은 각각 57퍼센트와 59퍼센트였다. 루아얄은 2004년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좌파가 대량 득표한 계층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일부 좌파 사이에서 유행하는 생각, 즉 과거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사르코지도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강령으로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민 규제를 선동하는

사르코지의 당선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 청년들

사르코지의 데마고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는 데 동의한 프랑스인이 1993년에는 53퍼센트, 1997년에 31퍼센트였던 반면 이번에는 28퍼센트에 불과했다.

적대감

사르코지는 좌파의 뿌리가 매우 깊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사실, 사르코지 자신도 이런 정서에 영합하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한다며 비난하고 유럽산 제품의 ‘보호’와 ‘유럽 농산물 우선’ 정책을 요구했다. 시라크 정부의 재무장관 재직 당시 사르코지는 32억 유로의 구제기금을 조성해 프랑스의 중공업 회사 알스톰이 파산하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사르코지의 승리는 유럽에서 벌어질 투쟁을 예고한다.” 울프가 우려하는 것은 사르코지가 “경제적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포퓰리스트 개입주의자”라는 것이다. 사르코지가 이끄는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외부적으로 비타협적인” 사회가 돼, EU 통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 지배계급의 대변자 가운데 울프 혼자서만 사르코지가 골칫덩이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사르코지가 선거에서 승리한지 이틀 뒤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단

호하게 옹호하면서, 사르코지에게 프랑스의 경제 문제를 유럽중앙은행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사르코지의 승리에 한계가 있고 그의 정치가 모호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대선 승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시라크가 대통령 재임 기간 12년 동안 오락가락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 반면, 사르코지는 강력하고 단호한 지도력 아래 프랑스 우파를 결집시켰다.

특히, 파시스트 지도자 장-마리 르펜의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언사를 일부 차용하며 사르코지는 국민전선(FN)이 주류 우파에 도전하지 못하게 봉쇄할 수 있었다. 사회당은 특히 프랑수아 미테랑의 대통령 재임기(1981~95년)에 교활하게 르펜을 이용해서 우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켰다.

시험

그러나 사르코지의 우파적 발언은 단순히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사르코지가 법과 질서를 훨씬 더 강조하고 더 거리낌없이 사회운동들을 탄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쯤에서 사르코지와 대처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할 듯하다. 대처는 보수당에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력을 제공했고, 국가 기구를 이용해서 주요 노동자 집단을 — 철강노동자 · 광부 · 인쇄공 · 항만노동자 — 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짓밟았고, 그 결과로써 신자유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놓았다.

사르코지도 프랑스에서 그와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 되면 유럽에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깨지고 우파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계급 세력 저울의 그런 변화를 성취하는 데는 선거 승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처도 영국에서 그런 변화를 성취하기까지 첫번째 임기(1979~87년)를 고스란히 바쳐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처의 승리가 결코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르코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사회운동,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를 모두 날려버린 경험이 있는 사회운동과 대면하고 있다.

이 운동이 사르코지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저항 권력과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찾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향후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단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토니 블레어 — 추락에서 사임까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노동당 총리로서 토니 블레어의 실패를 들춰내는 데서 그의 사임 시점만큼 절묘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가 처음 총리로 선출된 1997년 5월과 2007년 5월을 비교해 보자.

당시 블레어는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를 붕괴시킨 정치적 해일 덕분에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지금 그는 5월 3일 노동당이 겪은 선거 패배 와중에 슬그머니 총리 관저에서 내빼고 있다. 그는 심지어 마가렛 대처가 총리에서 물러날 때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없다.

블레어를 이해하는 데서 대처와의 비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에서 모두 그는 대처의 계승자였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볼 때, 대처가 없었다면 블레어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 핵심 노동자 집단들이 대처 정부에 패배하고 그 때문에 조직 노동자 운동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블레어가 노동당의 지도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규제

블레어는 대처의 정책들을 지속했지만, 대처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수준까지 그 정책들을 추진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했듯, “신(新)노동당은 — 보건, 교육, 근로 연계 복지, 주택 부문 전역에서 — 적어도 대처 시절만큼 광범한, 아마 그 이상의 대대적 변화를 도입했다.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을 구(舊)노동당 이데올로기보다는 보수당 이데올로기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보다 훨씬 더 쉽게 변화를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당의 경제 실적은 노동당이 오랫동안 떠들어 온 큰 자랑거리다. 블레어의 후임인 브라운은 [노동당 집권기 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없었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필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둘은 대처의 정책, 즉 영국 경제를 미국 경제와 긴밀히 통합시키고 미국의 자유시장 정책들을 따라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 계속 쇠퇴하고 금융시장 의존도가 심화했다.

블레어와 브라운의 집권기 동안에 런던 금융계는 번창했다. [그러나 또한] 이 때문에 전체 영국 경제가 심각한 금융 위기에 매우 취약해졌다. 그리고 많은 논평가들은 그런 위기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당이 영국을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에 옮기면 부정적 효과는 명백하다.

가장 분명한 것은 빈부격차다. 1997

년 이후 브라운은 자산 조사 급여[자산 조사를 거쳐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와 세액 공제라는 복잡한 체계를 통해 자녀가 있는 빈민 가정에 거액의 공공 자금 지출을 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사회 상층의 부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탓에 빈부격차는 노동당 집권기 내내 좁혀지지 않았다.

‘재정정책연구소’의 마이크 브루어가 지적했듯, 브라운은 재분배에 수십억 파운드를 지출했지만 “완전히 허사”였다.

블레어는 공공 서비스가 개선됐다면 자신의 실적을 옹호한다.

사회적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블레어의 두번째 임기인 2001~2005년에 국립보건의료서비스(NHS)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추진한 시장 “개혁” 때문에 대개 무용지물이 됐다. 공공 부문은 꾸준히 사유화되고 있다.

반면, 지출 확대는 끝났다. 브라운은 금융시장에 자신이 구노동당 식 온건파가 아니라는 점을 필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정책을 포함해 훨씬 더 뻑뻑한 예산안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 수준 저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실질 가계소득은 하락하고 있다.

블레어 정부가 전통적 노동당 노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는 지난 3월 복지개혁부 장관인 짐 머피가 한 연설에서 잘 드러났다. 머피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복지] 급여는 이 나라 국민들을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한다.” “나는 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개혁

신노동당의 국내 [정책] 실패가 하도 심각한 나머지 이제 이튼교[영국의 명문 기숙 사립학교] 출신의 보수당 지도자 데이빗 캐머런조차 NHS의 수호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 NHS는 심지어 1980년대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조차 노동당의 고유한 쟁점이었는 데 말이다.

이러한 정책의 희생자들에게 신노동당이 제공하는 것이라곤 감시, 반사회적행동규제령(Asbos, Anti-Social Behaviour Order), 감옥의 끔찍한 과밀 수용뿐이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티모시 가튼 애쉬가 대외정책 분야에서 “블레어주의의 요체”가 무엇이나고 묻자 블레어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답했다.

아마도 더 정확한 대답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 서방 열강들이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강요하는 것 — 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언론인인 존 캄프너가 “블레어의 전쟁들” — 코소보 · 시에라리온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전쟁 — 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블레어는 이 중 마지막 전쟁을 도모하는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영국의 동참이 없었다면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침략 정당화를 위해 이용된 거짓말들에 대해 추궁을 받을 때마다 블레어는 자신은 “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우겼다.

블레어가 모든 법정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까닭은 그가 인류를 상대로 한 엄청난 범죄 행위 — 이라크를 파괴하고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 — 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말의 뉘우침조차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말기의 가장 끔찍한 만행들을 주도한] 키신저와 마찬가지로 블레어는 은퇴한 뒤에도 높은 보수를 받고 거들먹거리며 부자들의 세계에서 지낼 것이다.

그러나 또한 키신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블레어는 전쟁 범죄 조사관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다.

슬프게도, 블레어주의는 그가 싫어하지만 피할 수 없는 후계자 고든 브라운 덕분에 정치적으로 블레어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물려난 것은 참으로 속 시원한 일이다.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 2050호에 실렸으며 번역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http://www.counterfire.or.kr>)를 보시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आय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외대 당국은 보직교수들이 파업 중인 외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한 ‘다함께’ 외대모임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9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10일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조명훈 동지를 만나 그 간의 투쟁을 들었다.

“무기정학 무효” 판결을 축하합니다. 동지의 징계 철회 투쟁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징계가 결정된 뒤, 저는 매일 아침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징계 철회 서명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참했고, 징계 철회 집회에는 학생과 노동자 2백여 명이 참가하기도 했죠.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학교 밖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선배들까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난 4월 18일, 보직교수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는 국가인권위 판결이 나와서 징계를 고수할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박철 총장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며 면담조차 거부했어요.

그리고 5월 10일, 외대 당국의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



이 나온 것이죠. 법원은 “[보직교수의]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한국외대의 구성원으로서 … 능히 의견을 개진·표명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의 보직교수 성희롱 인정 판결이 큰 영향을 준 듯해요. 학교 바깥의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국내 단체뿐 아니라 영국 하원의원 조지 갤러웨이, 포츠머스 대학 노동조합 등의 국제적 연대도 큰 힘이 됐죠. 이런 광범한 연대 덕분에 법원도 저의 손을 들어준 거죠.

법원 판결 이후 학생과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지난해 박철 총장의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다 파업을 접어야 했던

직원 노동자들이 많이 기뻐하세요. 모두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슴속에 한과 울분을 쌓아두고 계셨거든요.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나 해고노동자들처럼 계속 투쟁하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파업 뒤 복귀했지만 학교 당국의 집요한 분열 책략 때문에 괴로워했던 직원 노동자들에게 이번 승소 소식은 단비와 같았겠죠.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 통쾌하다’, ‘승소 소식 듣고 모두들 좋아한다’고 축하해 주시는데, 정말 뿌듯하더군요.

학우들의 반응도 뜨거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학우들도 유인물을 보고 축하한다며 지지 문자를 보내줬죠.

바로 이런 분들의 후원 덕분에 법정 투쟁에 돌입할 수 있었고 또 승리까지 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이번 투쟁의 진정한 승자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국가인권위 판결과 이번 법원 판결은 사실상 학교 당국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항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봐요. 따라서 학교 당국이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를 완전히 철회하도록, 지지와 연대를 확대해 더 강한 압력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인터뷰 · 정리 승주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에 사측이 물러서다

정리해고·단협 파기·일방적 분사·잔업 폐지·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백화전 식 탄압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사측은 “불법파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합원 1천3백여 명의 단호한 파업으로 화성공장의 60퍼센트 이상이 가동 중단되자 꼬리를 내리고 교섭에 나섰다. 5월 10 i 11일 파업으로 회사는 수백억 원의 생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타협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도 엄포로 끝나고 만 것이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은 감동의 드라마 같았다. 1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고소고발 협박에 굴

하지 않고 민중광장에 모였다.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들도 퇴근하지 않고 파업을 사수했다.

이날 파업의 동력은 정리해고와 분사·분할에 맞서 한 달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백상’과 ‘백우’의 고령 노동자들이 보인 투지와 식당 여성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핵심이었다. 또 파업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정규직 ‘선봉대’ 동지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기아 자본이 교섭 석상에서 양보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은 중단됐고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다.

파업을 일시 철회한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5월 17일부터 전면 파업을 다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사회 포럼

서울 동부
자유무역의 신화와 현실
— 대안은 무엇인가?
5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이정구(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서울 서부
국민연금 개혁의 진실
—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가?

5월 23일(수) 오후 7시 45분
연사: 장호종(주간 <맛불> 기자)
장소: 아트레온토츠(신촌역 4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17-267-0400

서울 중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5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연사: 안준관(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에너지본부 부장)
장소: 명동 향린교회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대학 맑스주의 포럼

건국대
신자유주의를 넘어
—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
연사: 김용욱(주간 <맛불> 기자)
일시: 5월 22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상허관 314호
문의: 010-6636-5349

이화여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5월 30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 010-6890-8796

“삼성이라는 비정규직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이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SDI도 울산·군포 등 전국 각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노동자들은 ‘삼성 비정규·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단’을 만들어 삼성과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공동 투쟁 결의 대회”에는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 SDI 사내기업 하이비트 노동자 황선목 동지와 삼성코레노의 민주노조추진위원장 노경진 동지를 인터뷰했다.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황선목: 우리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휴대폰 액정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부려먹더니,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하이비트 외에도 영성전자·명운전자·그린전자 같은 여러 회사 하청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거나 폐업으로 내몰렸습니다.

노경진: 삼성코레노의 경우 한 달 기본급이 77만 원이었고 주야맞교대로 잔업과 특근을 해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성 노동자인데, 기숙사 생활을 시키며 여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공동 투쟁 결의 대회”

사감과 점호 등을 통해 감시합니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노조를 만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방도 바뀌요.

화장실 가는 시간과 횡수를 감시하고 통계를 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게시판에 공개를 했습니다.

‘무노조 경영’ 삼성에서 이처럼 조직을 만들고 투쟁에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황선목: 얼마 전 울산 SDI 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삼성이 용역을 동원해 노

동자들의 어머니들까지 폭행했습니다. 옷까지 찢어질 정도로 어머니들을 마구 밀쳐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라도 더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더럽고 치사한 행위들을 낱알이 알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노경진: 한 번은 생산 이사가 “기대해도 좋을 만큼 월급을 올려줄 테니 6개월만 열심히 일하자”고 해서 정말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작 시급 10원이 올랐어요. 그 날은 불만이 폭발해 1천2백 명 노동자 중에 2백 명이 잔업을 거부

했죠. 그 일이 계기가 돼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했다는 이유로 제 신상을 뒤통사해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후에는 천막 농성을 계속 했는데, 삼성의 사주를 받은 시청이 두 번이나 천막을 강제 철거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삼성 때문에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동지들이 투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선목: 이미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노경진: 전자 쪽은 거의 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삼성의 노무 관리 방식을 따라합니다. 삼성이라는 고리를 깨야만 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서범진

독자편지 letter

@counterfire.or.kr

5월 20일(일)까지 투쟁 소식과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비평1〉 사르코지 비판이 더 있었으면

〈맞불〉 43호의 프랑스 대선 평가 기사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성과를 반영할 정치 표현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사르코지는 앞으로 잔인한 신자유주의 공격을 거듭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르코지의 승리를 자축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과 개혁을 바라

는 대중은 사르코지의 당선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맞불〉 43호 기사에서는 이런 정서에 공감하며 사르코지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하기보다 사회당의 무능과 배신, 좌파 진영의 분열에 치우치다 보니 마치 사르코지와 루아얄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처럼 들린다.

사회당과 독립적인 급진 좌파진영의 단일한 선거 대응이 필요했다

는 주장은 대중의 광범한 반우파 정서에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앞으로 벌어질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사회당 지도부에 대한 운동 진영의 분명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EU헌법 반대 투쟁에서 운동의 압력으로 사회당 일부 지도자들은 당의 지침에 반기를 든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르코지의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그런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예송

〈비평2〉 투쟁에선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할 수 있다

〈맞불〉 43호 프랑스 대선 평가 기사에서 김용욱 기자는 사르코지가 추진할 ‘개혁’에 맞서 “투쟁을 고무하고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반영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옹계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욱 기자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하는 것은 평범한 사회당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데도, 일관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결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김용욱 기자가 옳게 강조했듯이, 신자유주의에 타협해 온 사회당 지도부가 믿을 만한 동맹 세력이 못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특정 국면에서 그들이 투쟁에 가담할 때조차 그들과 “연합”(즉, 공동행동)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당 지도부가 좌경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당 지도부는 애초 CPE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6년 3~4

월 CPE 반대 투쟁 국면에서 운동이 거세게 고양되자 그들의 상당수는 — 매우 더뎠고 미온적이긴 했지만 — 운동에 합세했다. 자신들의 지지층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좌파의 올바른 태도는 그들의 투쟁 가담을 운동의 외연 확대 기회로 이해해 환영하면서도 그들의 정치를 추수하지 않는 것이어야지, 투쟁에서 연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

김용민

〈답변〉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봐야

나는 사회당과 모든 종류의 공동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연합’(coalition)은 김용민 동지가 말하듯 단순한 “공동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적 일치, 정책 합의를 기초로” 하는 “정치상의 연합, 제휴를 말한다.”

정당 정치에서는 상당한 강령적 동의를 포함한 정당한 조직체 결성을 뜻한다. 그래서 영국 리스펙트의 정식 명칭은 리스펙트 ‘연합’이다.

나는 글 전체에서 연합을 이런 사전적 의미로 사용했다. 일례로 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산당은 사회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친사회당파 지도부와 반대파 지도부 사이의 논쟁으로 내용을 겪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둘이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 내 주장의 맥락은 이렇다. 사회당은 “급진좌파 진영을 중도로 견인하려” 한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투쟁을 고무하고 대중의 반신자유주

의 정서를 반영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투쟁” 과정에서도 사회당 지도부와 (본래 의미에서)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는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반CPE 투쟁 과정에서도 EU헌법 반대 진영 단체들은 사회당 지도부 일부와 공동행동을 했지만, 동시에 사회당과 독립적인 반신자유주의 연합 건설 논의를 계속 발전시켰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당 좌파 대열을 계속 반신자유주의 연합 건설 논의에 묶어둘 수 있었다.

한편, 이예송 동지는 사회당 좌파 이탈자들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맞는 말이다.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천정배가 한미 FTA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고 해서 ‘열우당 지도부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

김용욱

사회과학 책 판매 · 구입, 사진 게재까지 탄압

수구적 퇴행 시도를 저지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3월 30일과 4월 1일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출두요구서가 계속 발부되고 있다.

범국본의 정광훈·오종렬·허영구·전기환 등 상임대표들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출두요구서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활동가들도 출두요구서를 많이 받았다. 정종권 서울시장위원장, 최창준 성동구위원장, 허세욱 열사가 활동했던 관악구위원회 김수정 사무국장 등이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그 외에도 ‘다함께’나 ‘이윤보다인간을’의 활동가들도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경찰은 집회 사진 채증을 통해 3백여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1백여 명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라고 한다.

이번 출두요구서 발부는 분명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크게 성장했고, 이 쟁점이 대선까지 이어질 정도로 ‘판돈’이 커져가고 있다. 이번 공격의 바탕에는 이 운동의 성장과 확대에 대한 저들의 조바심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맞서 우리 운동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디긴 했지만 범국본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앞 기자회견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강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에 맞선 강력한 저항을 확대해야 한다.

이정구

사진작가 이시우 씨와 인터넷 헌책방 대표 김명수 씨의 구속은 노무현의 공안기관이 얼마나 막나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씨는 1990년대 후반 민통선 대인지뢰 제거 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 문제, 주한 미군이 보유한 화학무기 문제를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이 문제 삼은 비무장지대의 철책과 초소 사진, 대인지뢰 사진, 진해에 정박한 미군 핵잠수함 사진 등은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경찰은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된 이 씨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에 실린 사진들에까지 ‘국가 기밀 유출죄’를 적용했다.

이 씨가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비무장지대 안의 철책선이나 초소 등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사진들이다.

경찰은 이 씨가 2005년에 오산·청주·수원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 발이 있음을 폭로한 기사도 문제 삼았다.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사용해 수많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백혈병과 암에 걸려 죽게 만든 끔찍한 무기다. 이런 사실들을 폭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이지 결코 탄압받을 일이 아니다.

열화우라늄탄

한편, 인터넷 헌책방 대표 김명수 씨가 ‘이적 표현물 판매죄’로 구속된 것은 국가보안법의 마수가 이제 출판물에게까지 뻗고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다.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책들이 “노골적인 친북 성향의 이적도서”이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들”이어서 김 씨를 구속하고 관련 책들을 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우긴다.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책 1백72권을 “이적표현물”로 제시했는데, 그 목록에는 《공산당 선언》, 《국가와 혁명》, 《자본론》 같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맑스주의 기본 입문서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심지어 이런 책을 산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을 ‘범죄자 리스트’인양 구속영장에 기재해 놔다. 구입자들 중에는 진보적 단체 활동가들도 여럿 포함돼 있는데, 경찰이 이들까지 처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니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처럼 노무현의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출판물까지 제물로 삼아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이시우 씨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죽겠다”며 무려 26일째(5월 15일 현재)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씨의 부인 김은옥 씨는 서울구치소 앞 촛불집회에서 “이시우 씨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다. 남편이 저대로 죽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의 비장한 투쟁에 강력한 운동 건설로 답해야 한다.

조승희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마틴 하트-랜스버그 | 패트릭 본드 초청 강연회

중국 경제는 자본주의의 미래인가?

(마틴 하트-랜스버그 : 루이스 앤 클라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중국 경제성장의 원인과 그 이면에 있는 모순들을 다룬다.

대안세계화의 전략들

(패트릭 본드 : 남아공 크와줄루-나탈 대학교 시민사회센터 소장)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다룬다.

일시 : 5월 27일 일요일 2시 | 장소 : 고려대학교 | 참가비 : 5천원

주최: 다함께 | 문의: 02-2271-2395